주요 국정홍보 ❶(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우리나라는 6일 밤 뉴욕 유엔본부에서
192개국 가운데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며,
북 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노력에 기여하고
사이버안보, 기후 등 신흥 안보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당선

외교부

우리나라는 현지시간 6월 6일(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세계 평화와 안보에 일차적 책임을 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본격화하겠습니다.

2024-25년 임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당선

외교부

주요 국정홍보 ❷ [청년·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국토교통부, 2023년도 뉴:홈 사전청약 확대 계획 발표 6.7.

대한민국정부

"청년·무주택자 내집 마련 기회"

'뉴:홈' 6월 사전청약 시작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고 (약 7천호 → 약 1만호)
공급 시기도 늘립니다. (상·하반기 2회 → 6,9,12월 3회)

'23년 6월 사전청약 일정

공급 지역	공고	접수		발표
		특별공급	일반공급	
동작구수방사	6.9.	6.19.~6.20.	6.21.~6.22.	7.5.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6.12.	6.26.~6.27.	6.28.~6.29.	7.13.
고덕강일 3단지	6.13.			7.12.

사전청약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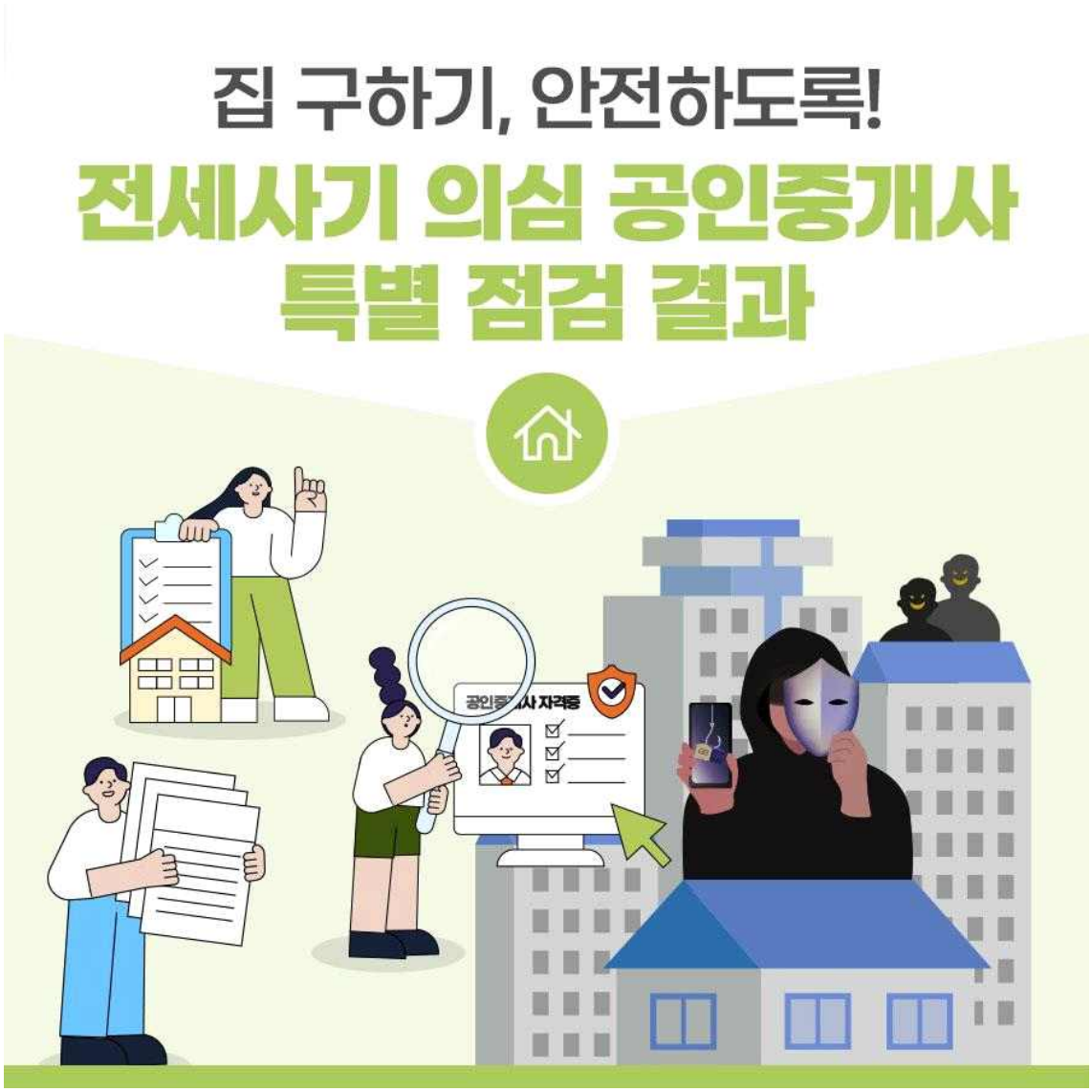
◆ **누리집**
동작구수방사,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 사전청약.kr
고덕강일 3단지 : i-sh.co.kr

◆ **현장 방문**
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 대상 / 전화 예약 후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

동작구수방사(02-407-8222) 남양주왕숙(031-575-8055)
안양매곡(031-8077-7979) 고덕강일 3단지(1600-3456)

주요 국정홍보 ❸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적발 사례 1
뒷돈 받고 전세사기 가담

경기 'ㅂ'시의 공인중개사 A.

A는 6개월 동안 34건의 신축 빌라 임대차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

중개보조원 B, C는 A에게
자신들의 물건에 대한 임대차거래 계약서 작성 시, 일정금액을 제공

➡ 공인중개사 A, 중개보조원 B, C 등에 대해 수사 의뢰('23.4.7)

적발 사례 2
전세사기에 중개업소 상호 대여

인천 'ㅁ'구 중개 알선인 B와 주택소유자 C는 바지 임대인 D에게 소유권을 넘겨 채무 회피와 보증금 편취를 사전에 공모

임차인 E는 부동산 앱을 통해 중개 알선인 B를 만나 임대차 계약 (계약서는 공인중개사 A 작성)

➡ **중개업소 상호, 성명 대여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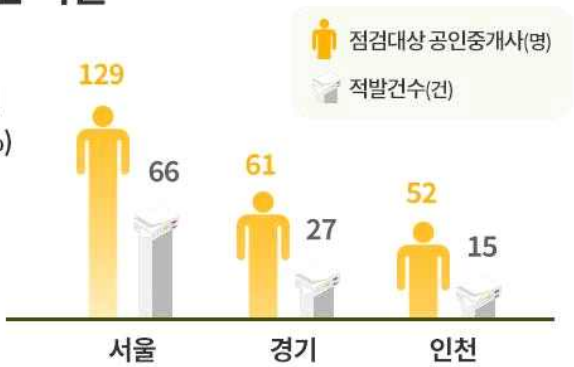
점검 결과

99명의 위반 행위 108건 적발

’23년 2월 27일 ~ 5월 19일 특별 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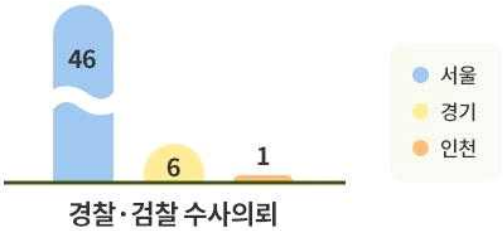
-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

공인중개사 242명 점검 결과, 99명(41%)의 위반 행위 108건 적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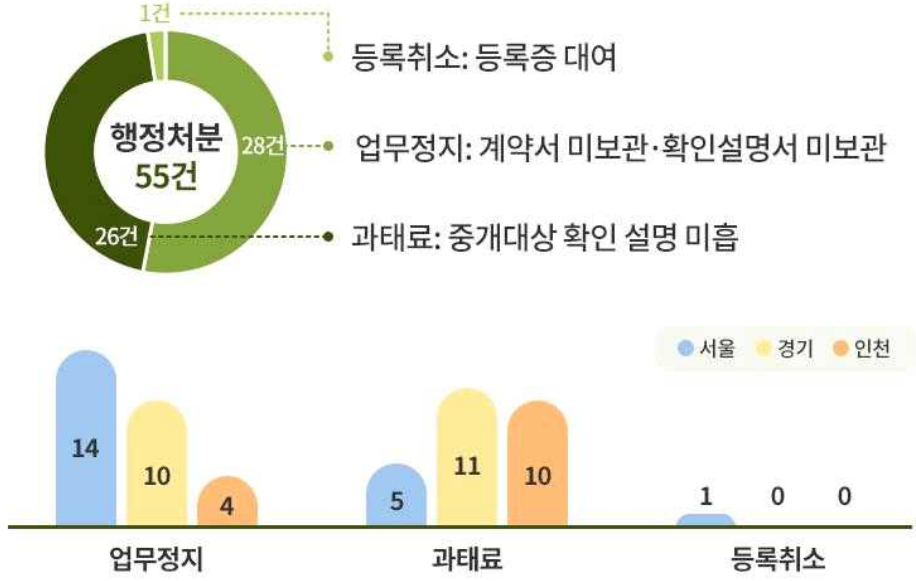
위반 행위
수사 의뢰 진행

위반 행위 108건 중 경찰 수사 의뢰 53건



위반 행위
행정처분 진행

위반 행위 108건 중 행정처분 55건



안전한 주거를 위해
불법 행위 공인중개에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 2차 특별 점검('23.5.22~7.31, 전국 3,700명)

국토교통부

주요 국정홍보 ❹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순조]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순조로운 연착륙 지원중

대출잔액 · 차주 수 감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연착륙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6월 8일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 · 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

금융위원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순조롭게 진행중입니다!

자금여력 · 업황 개선 ·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 ·
금융권자체 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등

금융위원회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액 중 92%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지원됩니다.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으로, 통상적인 대출이 이자를 정상 납부시 만기가 재연장(Roll-over) 되는 것과 동일한 사안으로 평가

만기연장 · 상환유예 지원액 중 8%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거치기간(1년) 및 분할상환(최대 60개월) 이용

상환계획서
98% 작성

- **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 제공
- **금융회사**는 최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금융위원회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주요 국정홍보 ⑥ [민관협력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⑥ (비대면 진료사업 둘러보기)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보건복지부

2023.6.8. 기준

비대면진료

서비스 절차 한 눈에 둘러보기!

대상 환자

재진환자,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등

사전 문진

비대면진료 대상에 해당하십니까?

yes

no

비대면진료 불가

비대면진료 실시

진료실에서 화상진료 원칙

처방전 발급

의사가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방전 발급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처방 불가

처방전 전송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이메일, 팩스 등 이용)

비대면 조제·전달

조제 가능여부 및 수령방식 등 협의

복약지도(구두+서면) 의약품 전달

대상환자 확인

보건복지부

2023.6.8. 기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대상환자 확인방법

의료기관	대상환자	기준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대면 진료 경험자	▸(만성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림 ->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
		▸(그 외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소아 환자)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 의료기관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상 연령, 진료시간 확인
병원급 의료기관	희귀질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1년 이내)를 받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자	▸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 ▸ 환자의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여부 확인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30일 이내)를 받은 환자로서,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경사급고의 설명에 한함	▸ 의료기관은 환자 의무기록 확인

보건복지부

2023.6.8. 기준

초진이 허용된 대상환자 확인방법

의료기관	대상환자	기준	확인방법
의원급 의료기관	섬·벽지 환자	▸「보험료 경감 고시」별표 1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 대상여부 확인 후 의료기관에 고지 ①환자의 주소지 섬·벽지 지역 해당 여부 확인 ②건강보험료 고지서 내 '섬·벽지 경감대상' 확인 ③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문의
	거동 불편자	▸(노인) 만 65세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 의료기관에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제시
		▸(장애인) 장애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인 환자	▸ 의료기관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제시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 격리통지서, 문자 등 격리 사실 통보내용 제시

주요 국정홍보 ❼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란?

AI 기반
학생 진단·분석

→ **학생**
최적의 학습경로와
맞춤 처방 및 지원 제공

→ **학부모**
학업성취, 교과 흥미 현황 등
자녀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공

→ **교사**
학급별/학생별 학업 참여도 등
학생별 지원 필요사항 제공

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는 언제부터 어떤 과목이 도입되나요?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 도입

~2028년

국어, 기술·가정, 사회,
과학 과목으로 확대

★ 신체적 불편, 다문화에 관계없이 누구나 맞춤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화면해설, 자막, 다국어 번역 기능 제공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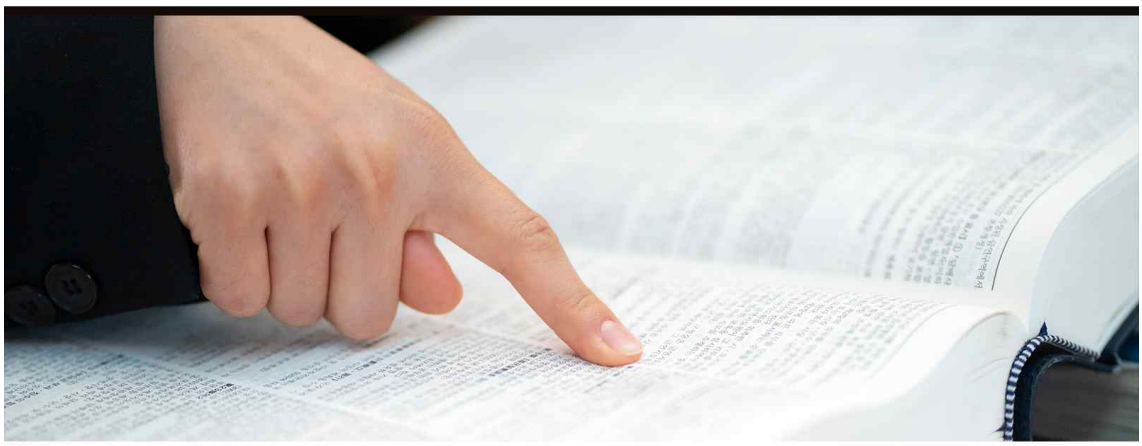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형 교육시대를 열고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 www.moe.go.kr 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국정홍보 ⑧ [사형집행 시표 30년 폐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오늘(6. 5.)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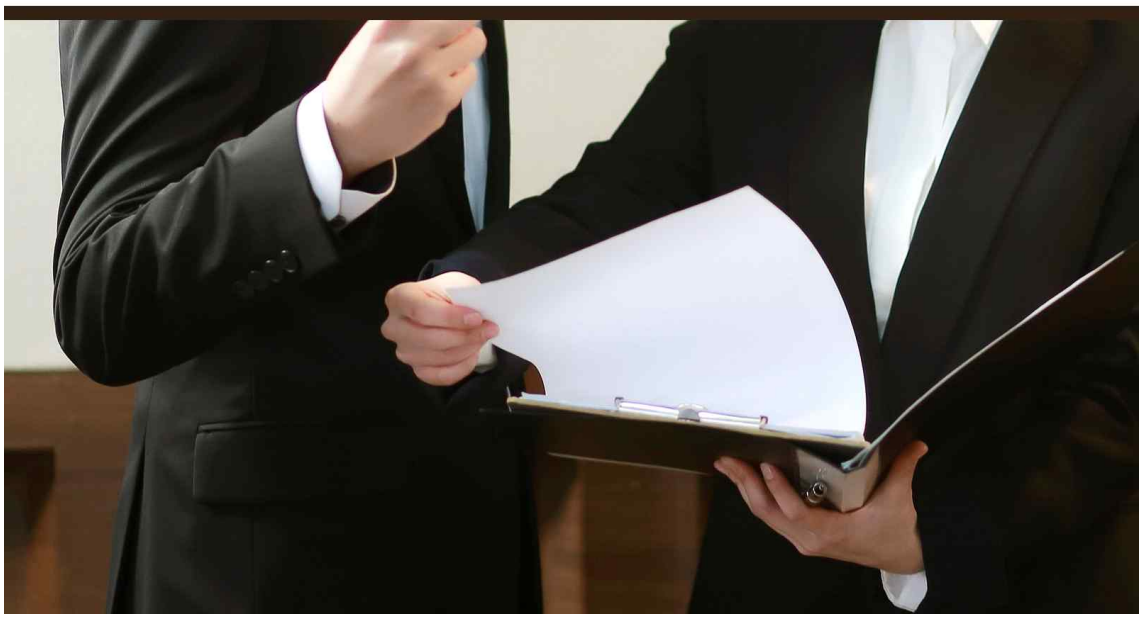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 30년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개정안 주요 내용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여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현 행	개 정 안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사형은 제외한다)**을 선고받은 자----------.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 7. (생 략)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 1. **(삭 제)** 2. ~ 7. (현행과 같음)
第80條(時效의 中斷) 時效는 **死刑**, 懲役, 禁錮와 拘留에 있어서는 受刑者를 逮捕함으로, 罰金, 科料, 沒收와 追徵에 있어서는 强制處分을 開始함으로 因하여 中斷된다.	**제80조(형의 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 및 구류의 경우에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 벌금, 과료, 몰수 및 추징의 경우에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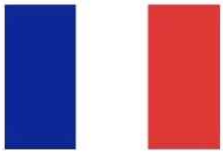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제78조제1호 및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무부

주요 국정홍보 ⑨ [윤 대통령, 프랑스-베트남 순방]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일정



프랑스

6월 19일 – 21일

- 한-프랑스 정상회담
- BIE 총회 프리젠테이션
- 한-프랑스 미래 혁신 세대와의 대화
-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 유럽지역 투자신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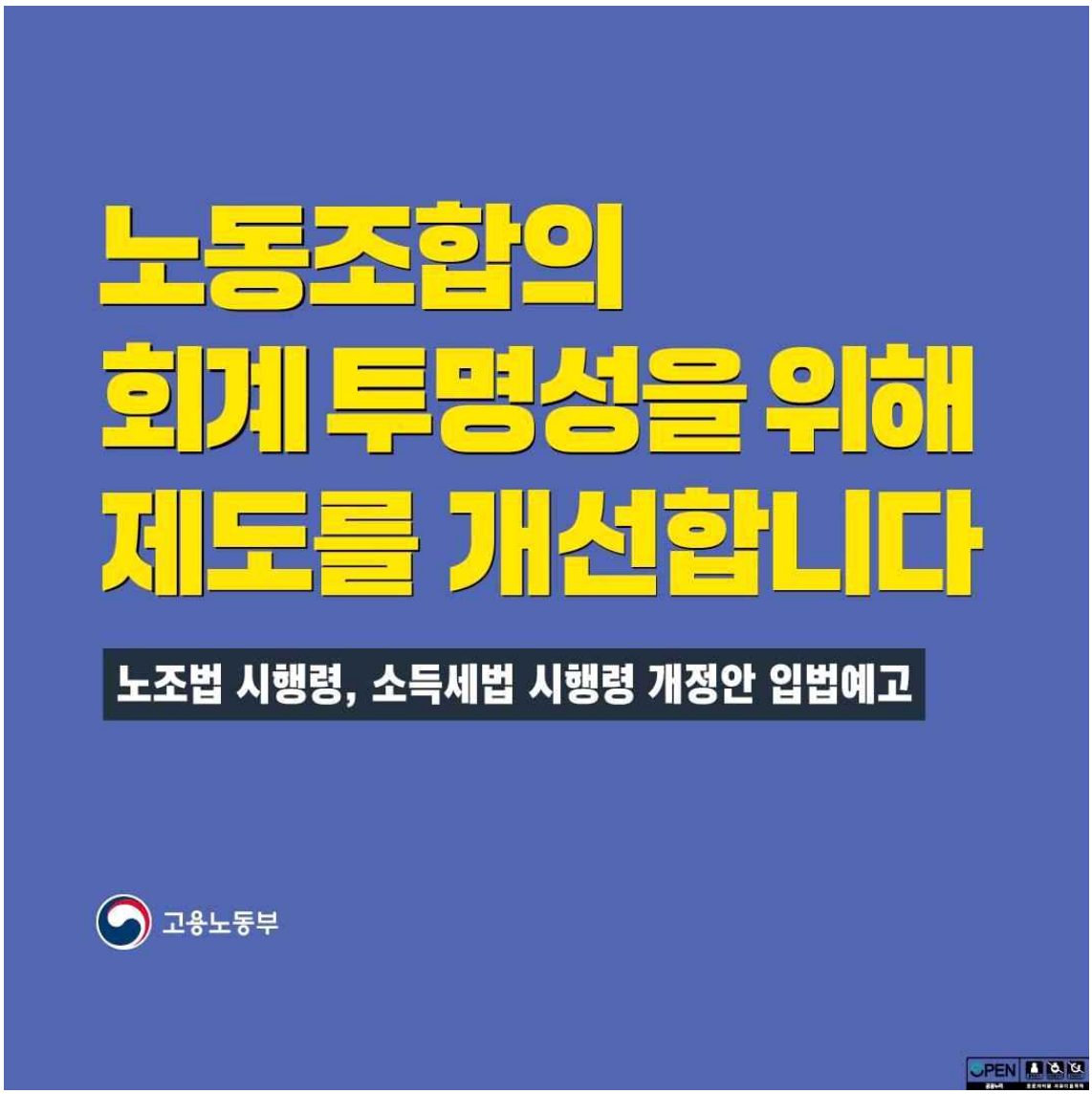
베트남

6월 22일 – 24일

-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참관
- 한-베트남 정상회담
- 현지 진출 대표 기업인들과의 오찬
-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주요 국정홍보 ⑩ [노조 회계투명성 위해 제도개선]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노동조합의
회계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①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 **관련 업무 종사 경력**
-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체화**

조합원이 신뢰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갑니다.

② 조합원의 알 권리를 강화합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게 결산결과 등 공표
*회계사·회계법인 감사는 3개월

③ 회계 공시시스템을 통해 자율공시를 지원합니다.

조합원 정보접근성 강화,
미가입 근로자 노조 선택권·단결권 보장

노동조합비의 공공성·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결산공시

공시시스템에 매년 4월 30일까지 결산 결과 공시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9월 30일

세액공제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경우 조합비 세액 공제

시행시기

'23년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조에 대한 '24년 조합비 납부분부터 적용

주요 국정홍보 ⑪[수산물 안전 관련 소통계획]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 관련 소통계획 발표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소통계획 마련

주요 내용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

·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

· 수산정책실장 중심으로 수산물 안전관리, 안전소비, 국민소통 등 주요 과업별로 7개 팀을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

해양수산부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

· 수산물 안전 궁금증과 우려 해소를 위해 어업인·유통관계자에게 직접 '수산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

·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을 위해 향후 어촌계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설명회 추가 진행 계획

지역	일시	주요 예상 참석자
부산	6.13(화) 14시	부산권역 어업인, 공동어시장 등 유통관계자
경남	6.14(수) 14시	경남권역 어업인
서울·인천(차관)	6.16(금) 14시	서울 · 인천권역 유통관계자
경기	6.20(화) 14시	하남 수산물 시장 유통관계자
강원	6.21(수) 14시	강원권역 어업인
전남(차관)	6.23(금) 14시	전남권역 어업인
충청·전북	6.27(화) 14시	충청, 전북권역 어업인
제주(차관)	6.28(수) 10시	제주권역 어업인
경북	6.29(목) 14시	경북권역 어업인

해양수산부

수산물 안전관리정책 참여 채널

· 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과 ②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운영 중,
③ 메일링 서비스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

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올해 3월 위촉
②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게시판
③ 국민 누구나 방사능검사 정보를 메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seafoodsafety.kr

해양수산부

안전한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안심 1 국내산 수산물 안전합니다

꼼꼼한 3중 방사능 검사 체계

92개 정점 | 위판장, 양식장 등 | 시장, 마트 등

국제 대비 엄격한 방사능 검사기준

식품내 방사성 세슘($^{134}Cs+^{137}Cs$)기준

EU	미국	CODEX	한국
1,250Bq/Kg	1,200Bq/Kg	1,000Bq/Kg	100Bq/Kg

국제 대비 10배 이상 엄격

* 100Bq/Kg 기준은 위 X선 검사 1회 받는 것의 2.6% 노출량 수준

2011년~지금까지 약 3만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적합**

안심 2 문제있는 일본 수산물 절대 수입하지 않습니다

수입 금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생산 모든 수산물

꼼꼼한 방사능 검사

수입 신고별 매건 방사능 검사

철저한 원산지·유통이력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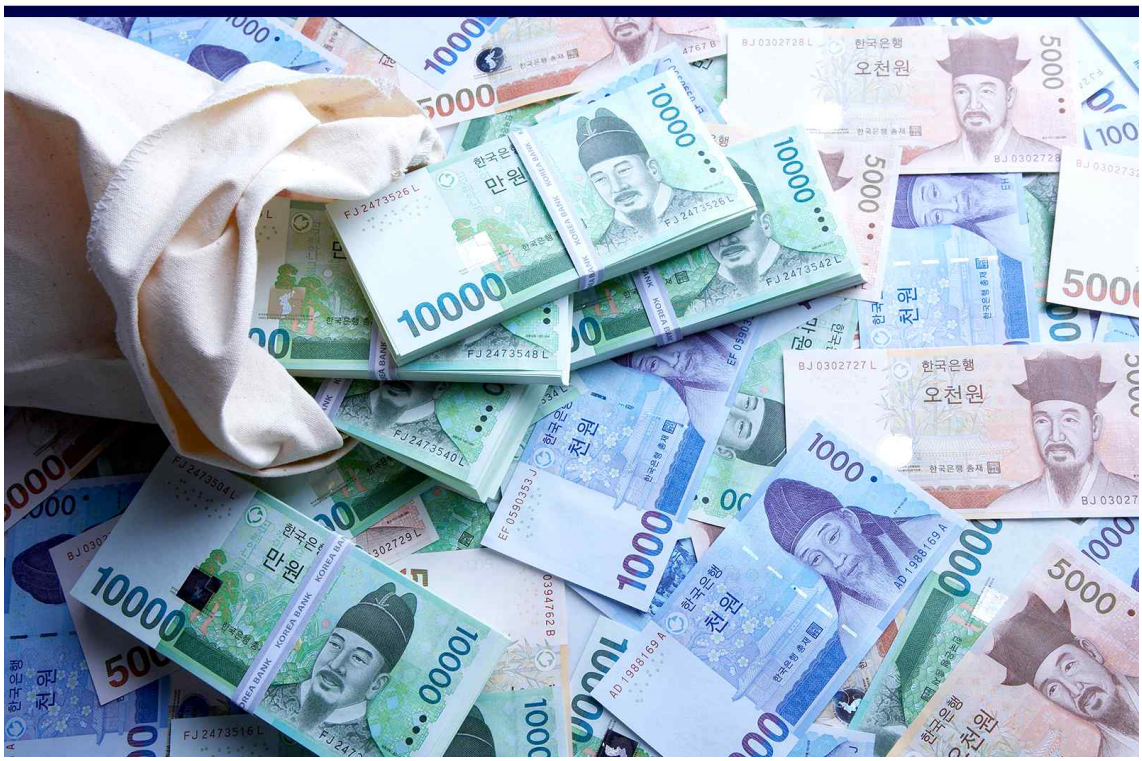
- 살아 있는 생물 전품목
- 음식점 20개 품목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seafoodsafety.kr)'을 통해 직접 방사능 검사 수산물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⑫[해외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수]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법무부는 6월 15일(목)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고, 이를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에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올해 71세(1952년生)인 피해자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 가량인 5,000만 원을 잃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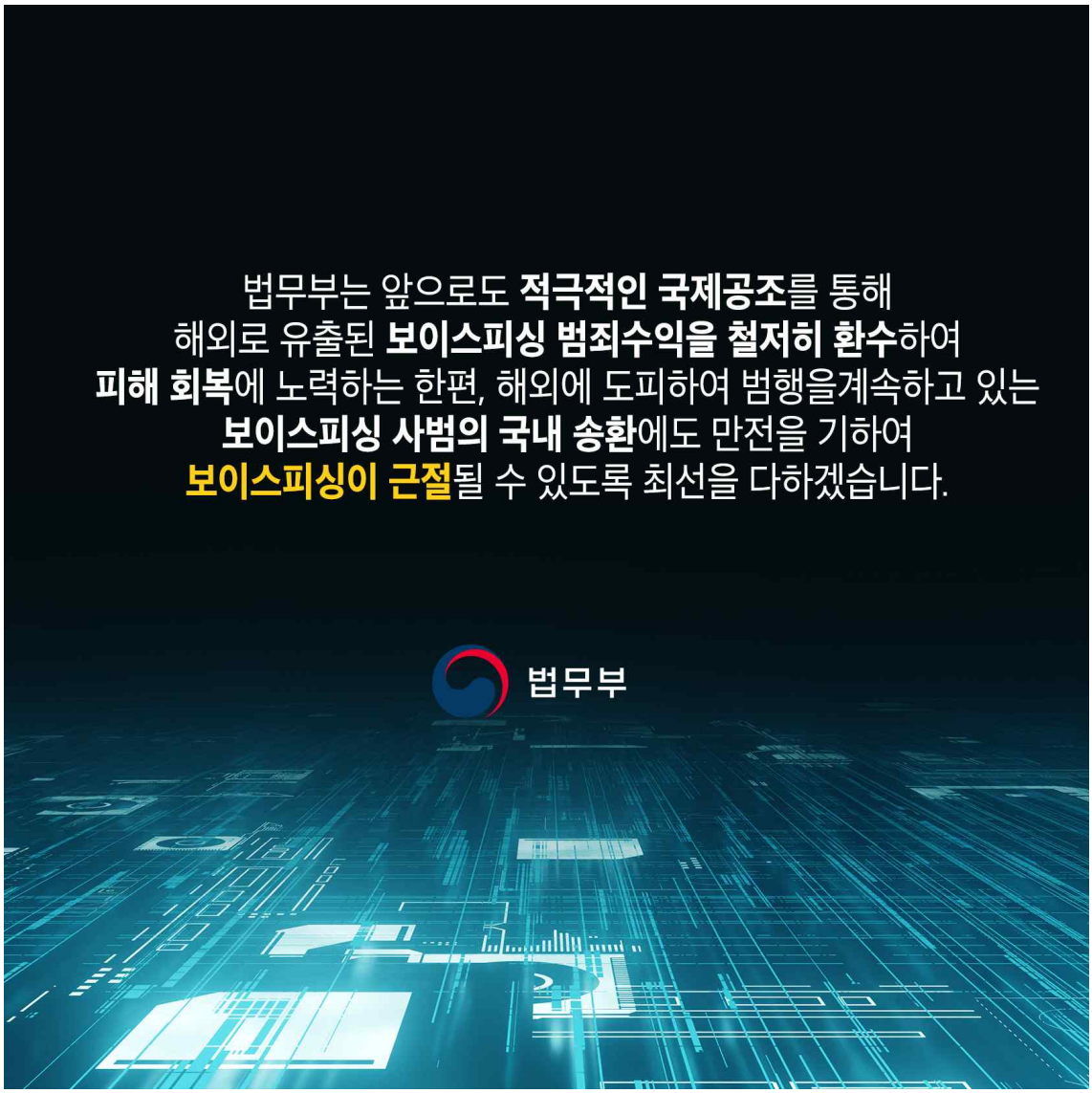
법무부는 위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출국하였다가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 위 현금 중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0년 8월 위 **현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이 급선무라는 판단** 하에, 조약의 부재 등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수회 실무협의를 통해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침내 6. 15.(목)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 그대로 인계받아 국내로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한 최초의 형사사법공조**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한편, 해외에 도피하여 범행을계속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부

주요 국정홍보 ⑱(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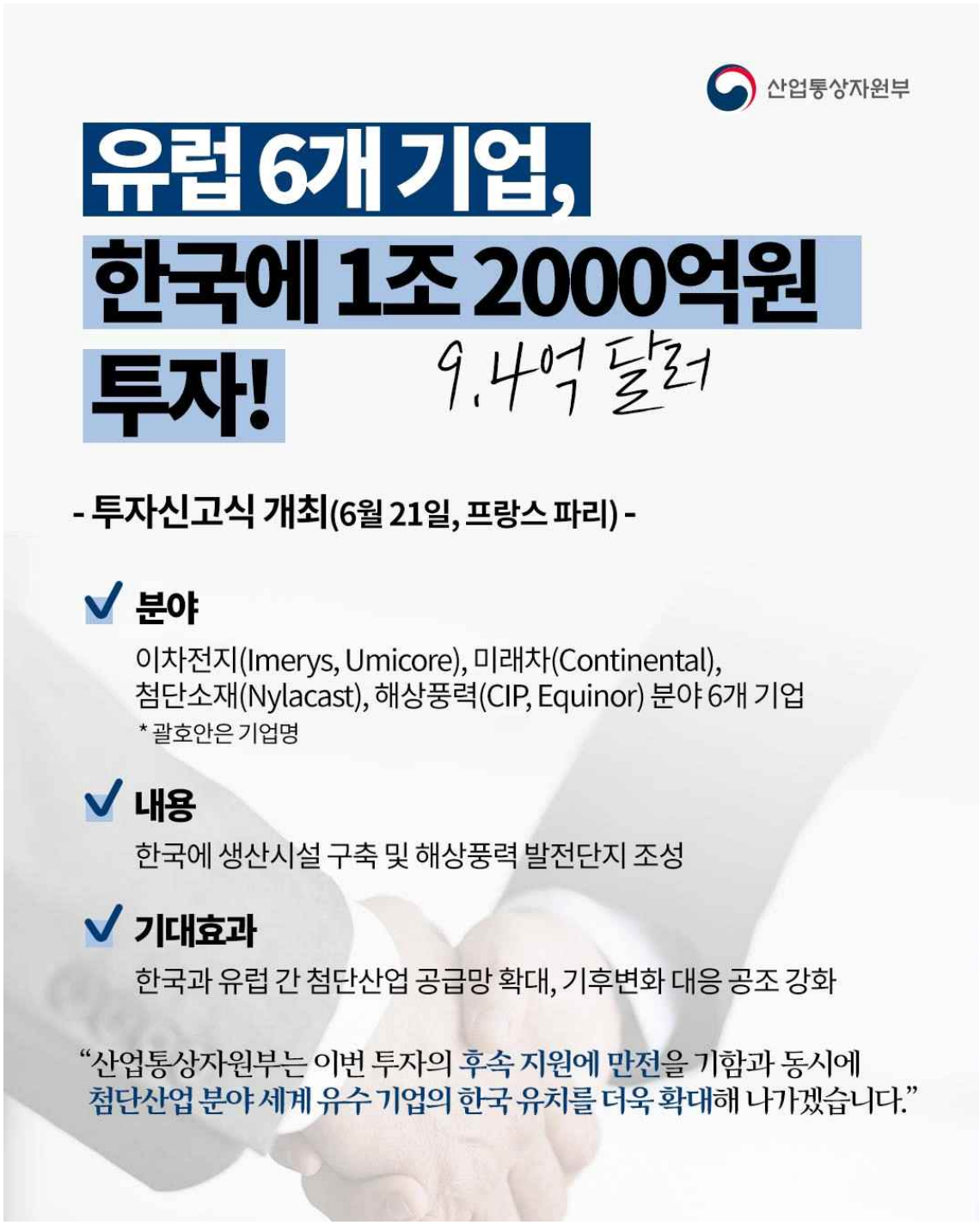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⑭(민간보조금 외부검증 확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⑮[유럽 6개 기업 1조 2000억 투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⑯(한-베트남 문화교류 확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윤석열 대통령 **베트남 순방 성과**

사진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누리집

청년세대의 열정 가득했던 대화의 장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6월 22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국가대에서 베트남 세종학당 수강생, 대학교 한국어학과 학생 등이 모여 K-콘텐츠를 교류하는 ‘한국어 학습자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세종학당의 교재, 세종학당 수강생들이 쓴 캘리그래피,
한글 티셔츠 등의 전시와 K팝, 유학 등에 대한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사진출처 : 대한민국 대통령실 누리집

청년세대 간 우정을 다진
“한국-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이날 베트남 국립컨벤션센터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대중음악 가수 4팀이 출연해 K-팝과 V-팝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양국 정부와 기업관계자를 비롯해 현지 한류팬, 한국어 교육생, 한국인 유학생 등 양국 청년세대가 함께 관람하여 화합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

“한국-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회담”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응우옌 반 훙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월 23일(현지시간) 하노이 대우호텔에서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문화교류 협력을 뒷받침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을 계기로,
MZ청년 예비교원 파견,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들의
한국방문의 기회 확대 등을 통해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의 지평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요 국정홍보 ⑰(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교육부

기초학력·기본인성 책임교육을 추진합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지원

정서·인성 교육 강화

- 학생 사회·정서 역량 지원, 인성·체육·예술교육 강화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으로 혁신합니다.

AI 기반 맞춤 교육

- AI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선도학교, 디지털 보조교사

교실수업 혁신

- 학생 참여형 수업, 교원의 수업·평가 역량 강화, 질문하는 학교 육성

교육부

학생의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확대합니다.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 선택과목 다양화 지원, 모든 선택과목 성취평가 시행, 과목이수제 적용 및 현장 지원

학교교육 다양성 확대

-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및 내실화, 마이스터고 2.0, 자공고 2.0, 기숙형 중·고 지원 등 지역 교육력 제고

교사가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역량 강화 및 환경 조성

- 수업 질 제고
- 교육활동 보호 강화
- 수업우수교사 우대
- 행정업무 경감

교육부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교현장 및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며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가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www.moe.go.kr

주요 국정홍보 ⑱[청년·신혼 매입임대 가구 모집]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혹시 청년, 신혼부부?
6월 22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 4,441호 모집

공급 호수
총 4,441호

청년
2,232호

+

신혼부부
2,209호

청년 매입임대주택
몇 년간 거주할 수 있나요?

최대 6년간 거주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오피스텔 등에서도 거주 가능

- 소득기준 100% 이하
-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 최대 6년간 거주

만 22세 대학생입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 가능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무주택자 미혼 청년 대상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신청자격	입주 순위		자산기준 (단위: 만원)	
			총자산	자동차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1순위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2순위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36,100	3,683
	3순위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29,900	3,683

5살 자녀가 있는 가족도 6년까지만 거주 가능한 건가요?

신혼부부 유형에 따라 최대 20년간 거주

신혼부부 Ⅰ 유형은 다가구 주택,
신혼부부 Ⅱ 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 가능

신혼부부 Ⅰ

- 소득기준 70% 이하 (부부 합산 90%)
- 다가구주택 등 시세 30~40% 수준의 임대료
- 최대 20년

신혼부부 Ⅱ

- 소득기준 1~3순위 100% 이하(부부 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 합산 140%)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등
  시세 60~80% 수준의 임대료
- 최대 6년(자녀 있을 시, 최대 10년)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신혼부부 I 유형, II 유형 입주 자격 차이가 뭔가요?

소득 기준

I 유형은 <u>소득 70% 이하</u>, II 유형은 <u>소득 100% 이하</u>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신청자격	입주 순위		자산기준 (단위: 만원)	
			총자산	자동차
무주택 세대 신혼부부 I *	1순위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36,100	3,683
무주택 세대 신혼부부 II **	2순위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소득 70%(맞벌이 9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소득 100%(맞벌이 120%)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매입임대주택
언제 접수하면 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apply.lh.or.kr)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1,550	6월 22일	7월 초	8월 중	8월 말
신혼부부 I	1,492				
신혼부부 II	717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486	6월 30일	7월 중	12월	'24.1월

매입임대주택
언제 접수하면 되나요?

경기주택도시공사 (http://gh.or.kr)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55	6월 9일	6월	10월	11월

대구도시개발공사 (https://www.dudc.or.kr/)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122	6월	6월	7월	8월

경상북도개발공사 (http://www.gbdc.co.kr/)

	공급호수	모집공고	신청접수	결과발표	입주일정
청년	19	6월 30일	7월	9월	9월

청년과 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요 국정홍보 ⑲[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8월7일)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 추진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에게**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원**입니다.

금융위원회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대상에 추가*합니다.

* 현재 DC, IRP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중

예금자가 동일한 금융회사에 보유한 다른 예금과 별도로

각각 5,000만 원의 보호한도 적용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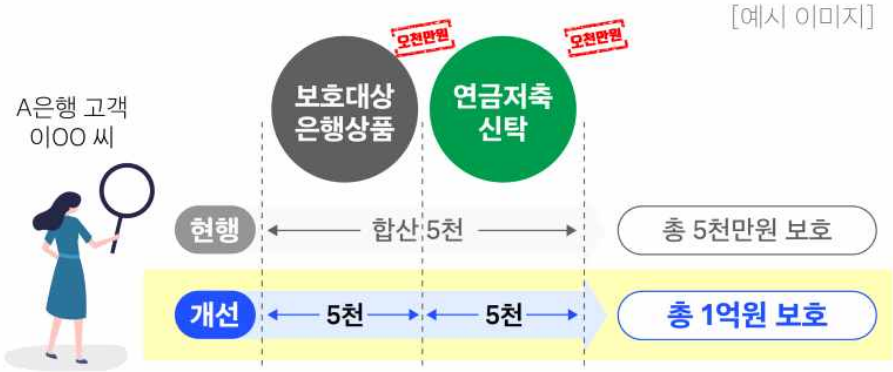
1. 연금저축(신탁·보험)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예시 이미지]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신탁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하여 총 1억원 지급

금융위원회

2. 사고보험금

사망, 입원, 장해, 재산상 손해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에**

예금보호한도를 별도로 적용 (만기보험금은 제외)

[예시 이미지]

▲보호대상 일반보험(해약환급금) ▲사고보험금 ▲DC형 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하여 총 1억 5천만원 지급

금융위원회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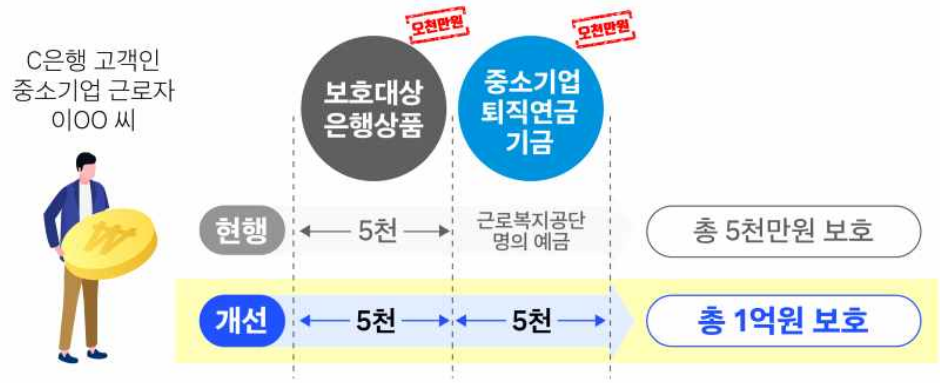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실예금자별(근로자) 보호

☑ 다른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부여

[예시 이미지]



금융위원회

주요 국정홍보 ㉑[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법무부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스토킹범죄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그간의 법 시행 경과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2월 15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하여,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측의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6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하여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대안 통과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유형 신설**(개인정보 등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및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잠정조치 기간 연장 등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주요내용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법원·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의무 신설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現 13세 미만→19세 미만)** ▶법원이 공판준비절차 통해 신문사항 미리 확인 ▶**중계시설(영상) 증인신문 시 최초 영상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실시** 원칙 규정 등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주요내용

▶**형 집행 종료 후 전자장치 부착 대상 범죄에 '스토킹범죄' 추가** (現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에 한정)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에 따른 집행 절차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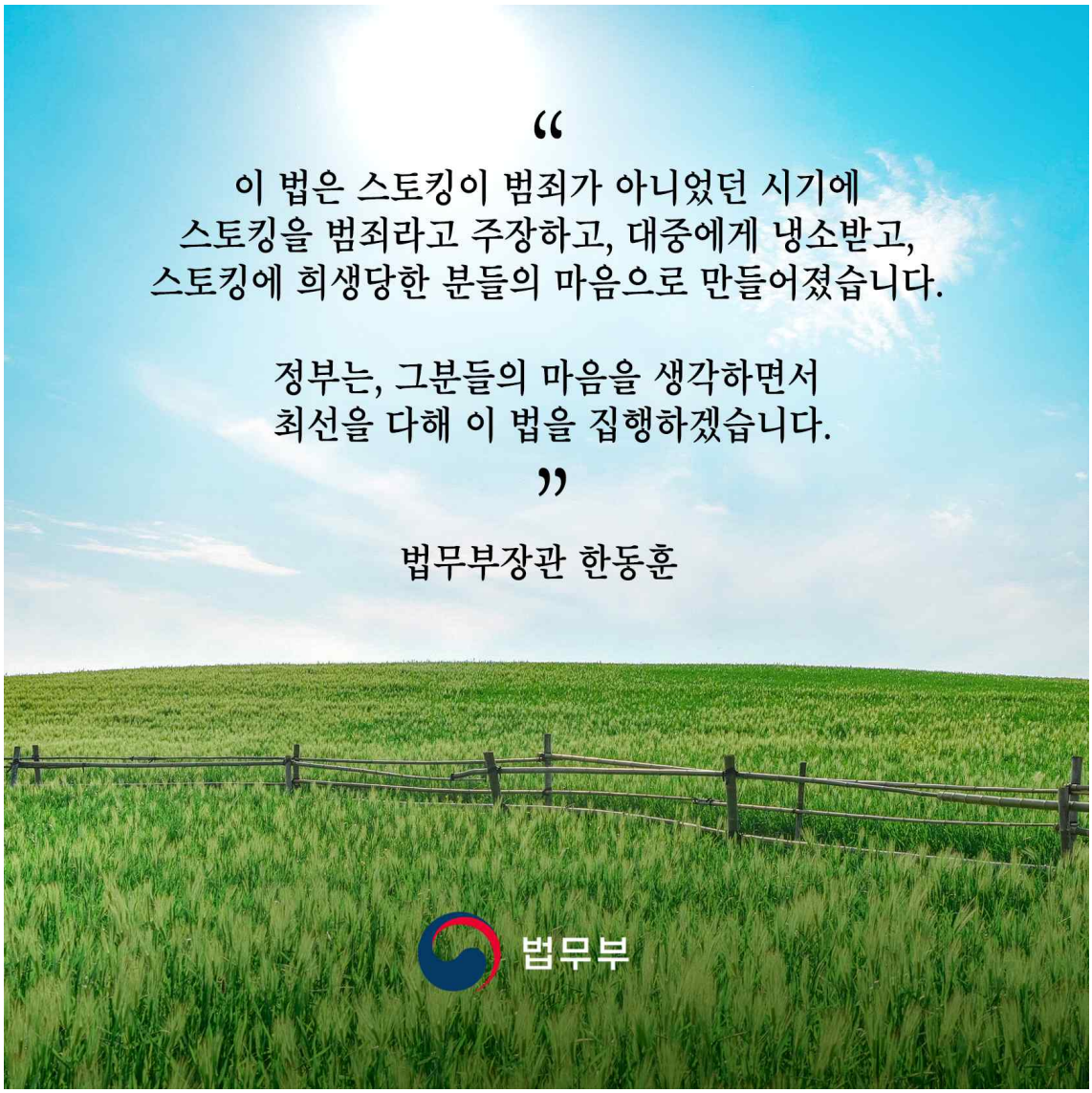
제출된 개정안은 **금일(6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전자장치부착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으로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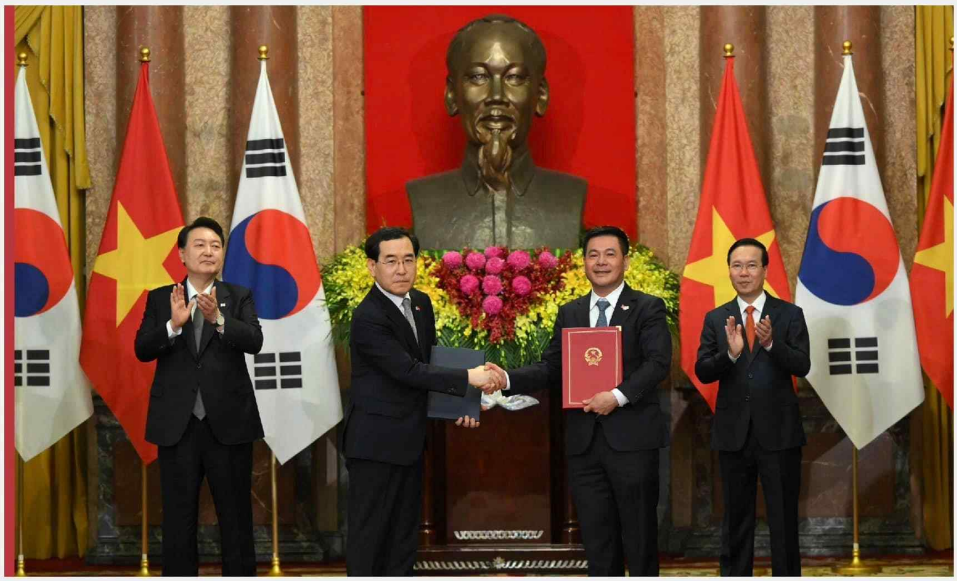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가 **도입**되어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법은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던 시기에
스토킹을 범죄라고 주장하고, 대중에게 냉소받고,
스토킹에 희생당한 분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부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 법을 집행하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주요 국정홍보 ❹(베트남 국빈 방문 성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 외교 장관 간 대화 **연례화**
- 베트남 **해양 안보 역량 강화** 지원
- 방산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

- 한-베트남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 설립 합의
- ‘2030년까지 교역액 1,500억불’ 달성을 위한 협력 강화
- 에너지 전환, 스마트 시티, 신규 개발 협력 등 협력 지평 확대

■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관계 발전 강화

- 베트남 미래 세대와의 밀착형 소통 행사를 통한 우호 증진
- 한국어 교육, 장학생 초청 등 미래 세대 교류 사업 확대
- '국제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협정' 체결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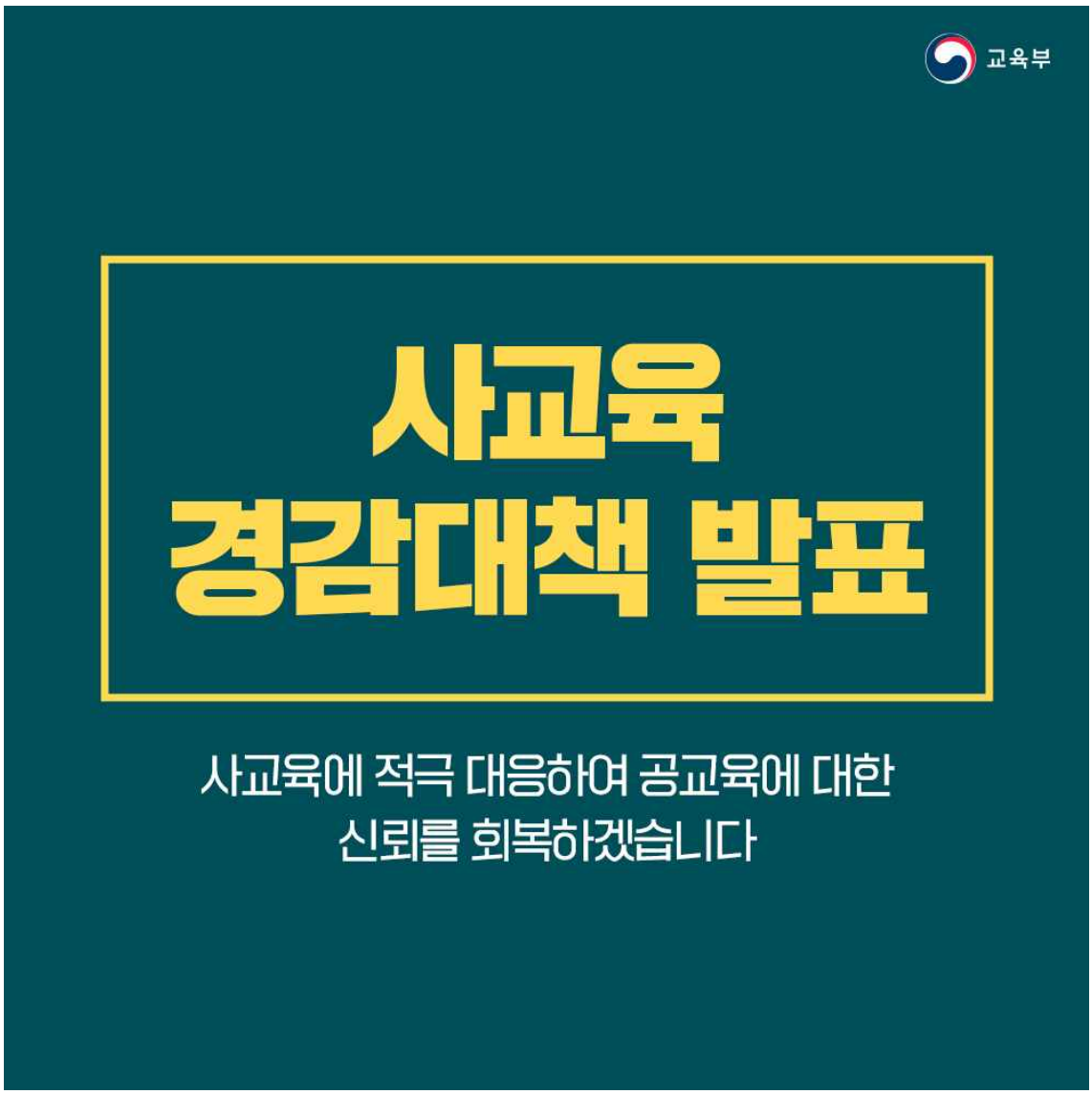
숫자로 말하는 성과

-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협력문서 **17건** 체결
- 비즈니스 포럼 시 기업·기관 간 MOU 역대 최다인 **111건 체결**
- **3년간 2억불** 무상원조, **7년간 40억불** 유상원조 계획 발표

베트남 과학기술 연구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3천만불 규모 신규 무상원조 계획 발표

주요 국정홍보 ㉒(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교육부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합니다.

- 공정한 수능 평가를 위해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 배제**
- **현장교사가 중심이 되는 자문위원회** 설치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합니다.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2주간 집중신고 기간** 운영
-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하여 일부 수능 전문 대형입시학원의 **편·불법 행위에 대응**

교육부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합니다.

-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 확대 추진
- 체육·예술 시설 확대 및 **디지털 새싹캠프 확산**

중·고교의 사교육 경감을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합니다.

- 수준별 강좌 확대 및 유료강좌 무료 전환 등 **EBS 활용 자기주도학습 지원**
- 공교육 내에서 튜터링, 화상과외 등 **교과 보충지도 강화**

공정한 입시체제를 구축합니다

- 고입·대입 **선행학습 유발 요인 점검** 및 **대입 정보 제공 확대**

교육부

유아·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합니다.

- 초등 입학 사교육 수요에 대비하여 **유-초 연계 이음학기 확대**
- 영어, 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방과후 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 확대**
-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을 **방지할 제도 개선** 추진

학부모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합니다.

- 불안심리, 거짓정보 등 **사교육에 과잉 의존하지 않도록 대국민 캠페인 추진** 및 **소통 확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www.moe.go.kr

주요 국정홍보 ㉓[출생통보제 도입]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정부 혁신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였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236명 있다는 사실 확인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2년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비롯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2023년 6월 30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출생사실의 통보 (법 제44조의3)

○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①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

②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없이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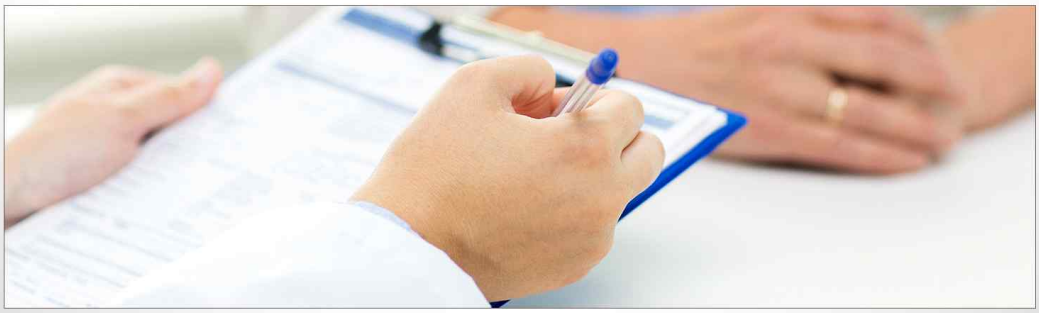
2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법 제44조의4)

○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아동이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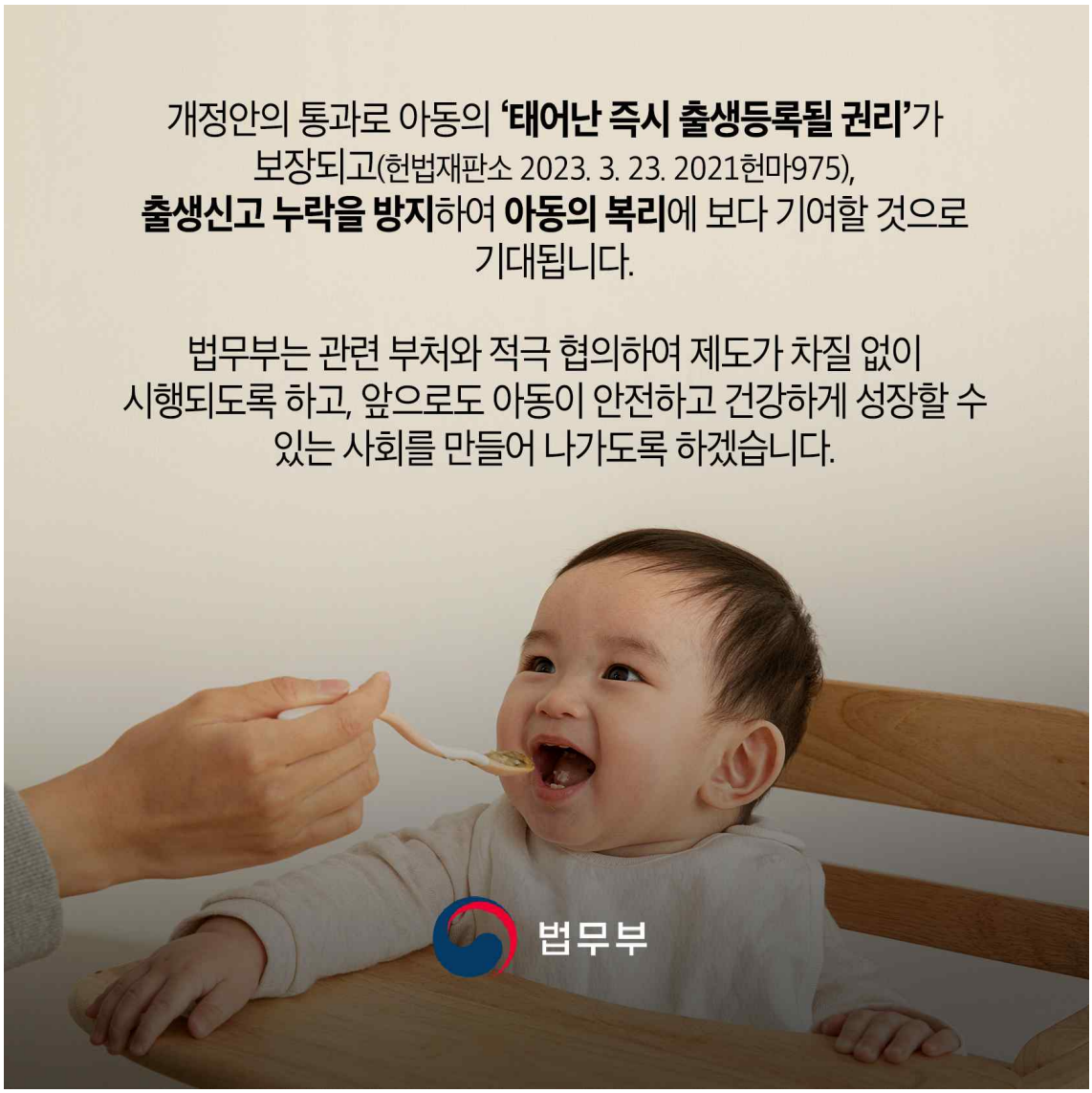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즉시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합니다.

* 혼인 중 출생자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출생자는 모

○ 신고의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하여야 합니다.



※ 시행일: 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헌법재판소 2023. 3. 23. 2021헌마975),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의 복리**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주요 국정홍보 ㉔[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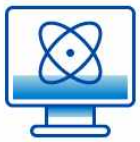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은
지난 1월 19일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에서 가진
윤석열 대통령과 양자 석학과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역대 최초의 국가전략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 전략 발표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적 양자과학 석학들과 미래세대들을 만나
>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에 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 목표

우리 기술로
양자컴퓨터
개발 활용



인터넷 강국에서
양자 인터넷
강국 도약

최고 수준
양자센서로
세계시장 선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략 과제

얽힘
생태계 조성

양자 핵심인재 **2,500**명
글로벌 인력 순환 **500**명

- 양자 융합 인재 육성
- 양자 소자·공정 인프라 확충
- 양자 소재·부품·장비 고도화
- 기술동맹 공급망 확보

도약
양자과학기술 발전

기술 수준 **85%**
양자 컴퓨팅 **80%**,
양자통신/센서 **90%**

- 한국형 양자컴퓨터 서비스
- 초기 양자네트워크 실증
- 세계 최고 양자센서 시작품
- 양자기초연구 지원

중첩
기술-산업 융합

세계시장 점유율 **10%**
양자 활용 공급기업 **1,200**개

- 양자 활용 수요 창출
- 양자 스타트업, 산업화 지원
- 국방·안보 적용
- 양자 집중권역 육성

투자 ₩

민-관 협력 투자 3조 원 이상
(기초연구+산업·응용) **정부** 2.4조 원('23~'35) **민간** 6천억 원('23~'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주요 핵심 지표

기술수준
2035 **85%**
현재 62.5% ↑

핵심인력 양성
2035 **2,500명**
현재 384명 ↑

양자분야 종사인력
2035 **10,000명**
현재 1,000명 ↑

양자시장 점유율
2035 **10%**
세계 4위 수준
현재 1.8%
세계 10위 ↑

양자기술 공급·활용기업
2035 **1,200개**
현재 80개 ↑

글로벌 인력순환
2035 **500명**
현재 53명 ↑

양자융합인재 양성, 임무지향형 연구개발, 양자산업기반 마련 등

핵심과제들을 꼼꼼히 챙겨

대한민국이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대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튼튼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국정홍보 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가조작을 엄벌하여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1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됩니다

- 그동안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하여 처벌까지 장기간 소요
-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효과적 제재수단 부재**

과징금 도입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2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겠습니다.

-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당이득이 제대로 산정되지 못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함**
-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 (총수입-총비용)으로 규정**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3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자의 제보가 활성화되고, 보다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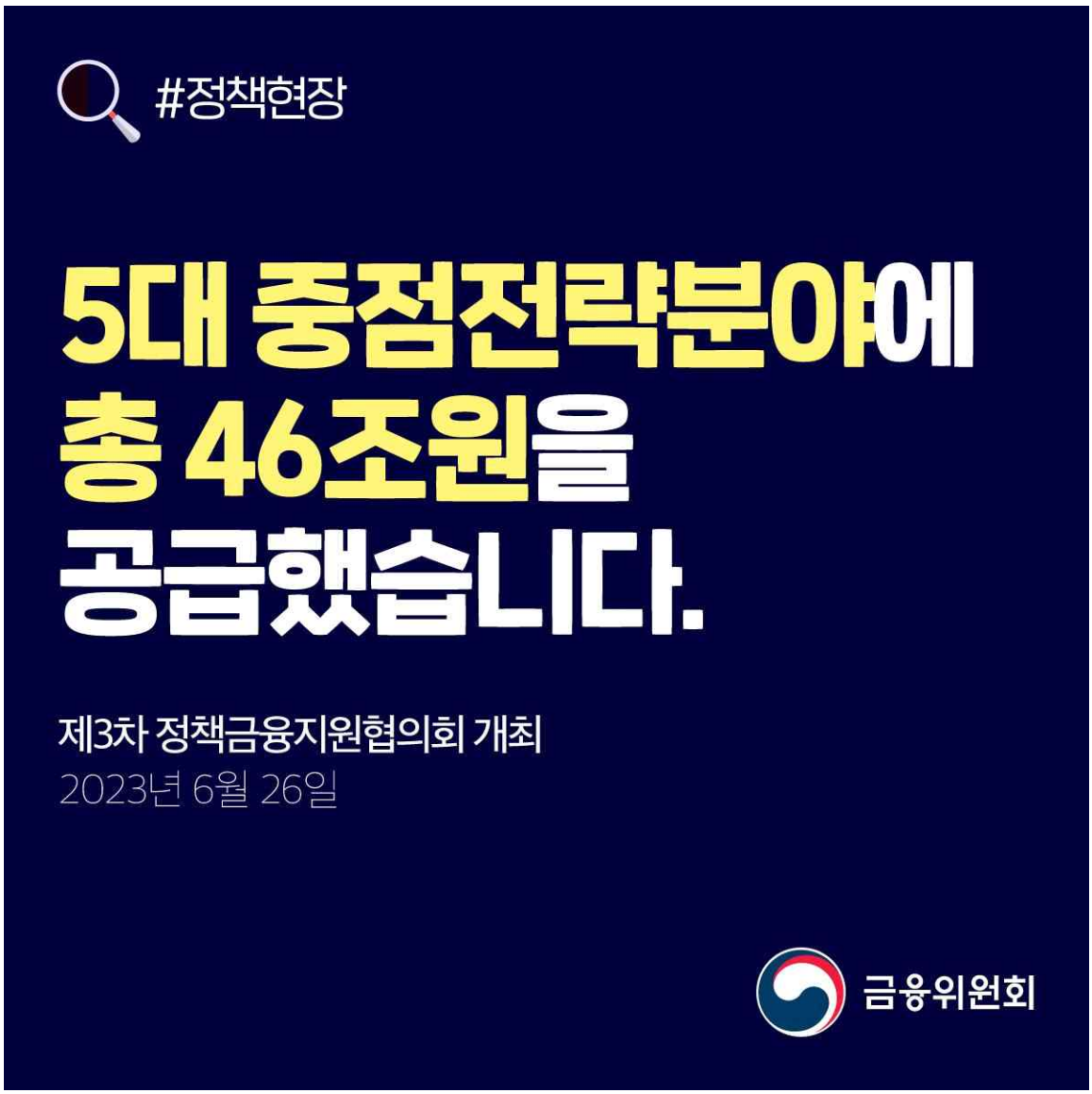
이번 법 개정안으로
주가조작범을 엄벌하여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6개월 후(2024년 1월 예상)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주요 국정홍보 ㉖(5대 중점전략분야 46조원 공급)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여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첨단산업인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펀드 조성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

✔ 정책금융기관은 2023년 5월까지 **정책금융협의회 선정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46조원**을 공급하였습니다.

-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7조 4천억원
- 미래유망산업 지원 9조 5천억원
- 산업구조고도화 10조원
- 유니콘 벤처 · 중소 육성 7조 5천억원
- 기업경영애로 해소 11조 9천억원

연간 목표치 대비 집행률 50.5%

✔ 산업별로 중점 육성이 필요한 우수기업을 선별하여 우대자금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핵심기업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 — 금융위원회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총 3천억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와 같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추가적인 정책금융 지원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 하반기에는 **우리경제의 빠른 반등**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운영하겠습니다.

- 수출금융 종합 지원방안 마련
-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글로벌 신기술 및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금융지원 강화
- 한계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등 경제 체질개선

주요 국정홍보 ㉗[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보건복지부

2023.6.29. 기준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의료·돌봄 수요 급증

2017
고령사회 진입
(712만명, 1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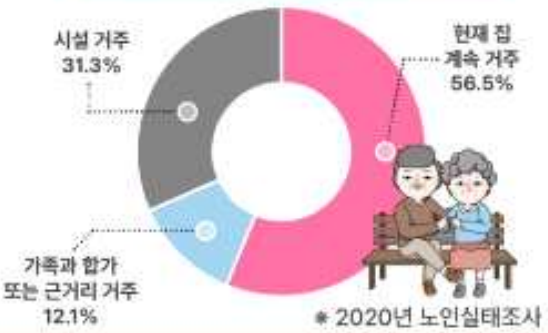
2020
베이비부머 세대
처음으로 고령인구 진입

→

2025
초고령사회 진입
(1,051만명, 20.3%)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계

노인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형태



※ 2020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23.6.29. 기준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기준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우선 대상, 그 밖의 노인 등은 사례회의를 통해 포함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서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장기요양등급 심사 중 또는 단기간 돌봄 수요가 큰 독거·부부 노인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높은 노인

보건복지부

2023.6.29. 기준

재가 노인 맞춤형 방문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관련 개별 제도 및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노인 기본 돌봄모형을 정립하겠습니다.

방향

- 의료-요양-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 방문 의료서비스 활성화

기간 및 규모

- 23년 7월부터 25년 12월 12개의 시군구(9개 시·도)

주요내용

-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2023.6.29. 기준

7월부터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

2023.6.29. 기준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함께합니다!

주요 국정홍보 ㉘(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Q1 만 나이 통일법 시행('23.6.28.)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적용 대상 연령이 바뀌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상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교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Q2 만 나이로 19세의 생일이 지나야지만 술·담배 등을 살 수 있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 가능

Q3 그렇다면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적용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A3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대상 연령 역시 현행 유지되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습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에 "19세 미만의 청소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대학생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숙박·야영 등의 수련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Q4 만 나이로 19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이 포함된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운영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수련활동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